

한국인 학살 부정하는 고이케 도쿄도 지사

태평로

이 하원
논설위원



거부했다. 일본 역사가 기록한 학살을 아예 부정한다. 울 초 도쿄도 의회에서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무엇이 명백한 사실이었는지에 대한선 역사가가 연구해 밝혀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고이케 지사는 보수 성향의 오미우리 신분이 지난 6월 ‘관동 대지진 100년 교훈’ 제목의 기획 기사에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지만 오지부동이다. 이 신문은 “유언비어를 접하고 각 지역에서 자경단을 결성, 재일조선인을 다치는 대로 묶어서 폭행해 죽게 했다”고 명시했다.

올해로 관동대지진 100주년 매년 보내던 추도문도 끊고 한국학교 이전도 백지화시켜 디지털인들이 嫌韓 막아줘야

올해 관동 대지진 학살 100주년을 맞아 최소한의 문체이식을 보여준 것이다.

고이케의 험한은 뿌리가 깊다. 고이케는 2010년대 중반 일본 사회의 우경화 바람을 타고 당선될 때 ‘제2 한국학교 설립 계획 백지화’ 공약을 내걸었다. 그의 전임 마스조에 요이치(舩添要一) 지사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동경한국학교의 확대 이전을 도와주다가 우익의 표적이 돼 낙마하자 극우 정책을 취했다. 고이케가 당선된 후 첫 일성(一聲)이 바로 한국학교에 도유지(都有地)를 유상 임대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던 2020년 7월 동경한국학교를 찾아가 취재하면서 고이케가 정말로 못할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 신주쿠에 있는 한국학교는 초·중·고 한국 학생 1400명이 다니는데 시설과 부지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운동장이 좁아서 축구는 절대 금지다. 교실이 부족해 분관 지하의 회의실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햇빛이 거의 안 드는 지하 교실에 책걸상이 뻗뻗하게 붙어 있었다. 지하실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치 지하 창고를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었다. 취재를 마치고 서울의 일본학교가 2010년 상암동의 최신 건물로 이전할 수 있게 한 서울시에 경의를 표했다. 한일 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국에 와 있는 일본 청소년 교육을 가로막는 ‘막장 행정’을 하지 않는 것에 안도했다고 할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조그마한 빈틈이 있으면 반일(反日)로 연결시키려는 세력이 한국에 존재한다. 언제든 축창가가 다시 불리고 ‘NO 재팬’ 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있다. 이럴 때 일본의 영향력 큰 정치인이 왜곡된 역사관으로 한국인의 가슴을 후벼 파고, 한국 청소년들을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다면 한국의 반일 세력이 장광할 수밖에 없다.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기점으로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희망하고, 기원한다.

김준의 맛과 삶 [151]

외달도 한방전복닭죽

말복도 지나고 태풍도 지나갔다. 바람 끝의 열기에 서늘함이 배어 있다. 태풍이 달갑지 않지만 가을도 함께 데리고 온 듯하다. 그렇다고 질긴 더위가 한풀에 꺾이지는 않으리라. 가을이 오고 여름은 버티는, 시작과 끝의 갈림길에서 있다.

팬데믹 종식 이후 처음 맞는 여름은 장마, 폭염, 태풍 등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허해졌다. 가을을 위한 몸살림이 필요하다. 예로부터 몸살림에 가장 큰 희생양은 닭이었다. 상술은 일반인의 상식을 앞서간다. 어린 닭이 먹기도 좋고 몸에 좋으며 만들어진 ‘영계백숙’이 보통명사로 등록했다. 이런 이유로 얼마나 많은 닭들이 열악한 곳에서 사육되어 여름 보양식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이 되었는가. 시골 마당에서 보았던 닭

들은 정말 사위처럼 어려운 손님이 오거나 온가족이 모이는 특별한 날만 잡았다. 닭을 잡는 날이면 어머니는 아침 일찍 솥에 물을 끓였다. 아버지는 닭을 잡고 닭발과 가슴살은 생으로 안주 삼아 술을 한잔하셨다. 그리고 가마솥에 큰 양념을 푼 삶아 삶은 발라 먹고 남은 뼈와 살을 넣고 죽을 끓였다.

외달도에서 그 맛을 불러낸 만큼 맛있는 닭죽을 만났다. 양계장이 아니라 밖에 놓아 기른 닭과 한방 약재, 전복을 넣어 푹 삶은 ‘한방전복닭죽’이다. 촌닭 한 마리에 전복이 네 개 들어가니 네 사람이 먹기 좋은 양이다. 물론 죽도 포함되어 있다. 닭과 전복은 외달도의 섬과 바다에서 기른 것이다. 주문을 하면 닭을 잡고, 바다로 전복을 따러 간다. 도심의 삼계탕처럼 냉장고에 쌓아두고



끓여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국물 맛이 입에 착 달라붙는다. 몸에 전달되는 맛이 시골집에서 먹었던 그 기억을 꺼내준다.

외달도는 폭포에서 40여 분 걸리는 섬이다. 해수욕장까지 갖추고 여름철이면 찾는 사람이 많다. 호젓한 자연 해수욕장과 있고, 숙소에서 다섯 걸음만 걸어가면 바다에 닿는 한옥집 펜션도 있다. 전라남도가 추진한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되어 새 단장을 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섬여행이나 효도 여행지로 좋다. 전복뿐 아니라 섬 주변 바다와 갯벌에서 잡은 농어, 우럭, 낙지도 맛볼 수 있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8·15에 “한일은 파트너” 尹 이례적 메시지, 일본 호응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은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며 공산 세력에 맞선 자유민주주의 수호, 산업화·민주화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곧 독립운동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을 밝혔다. 그는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며 “결코 이러한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며 대일 관계를 비중 있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시 일본 내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이 ‘자동·즉각 개입’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안보 파트너’라고 했다. 반일·극일 메시지를 전면 내세우는 게 일반적이었던 역대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달리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 규정하며 한일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일 정부 시절 파란 직전까지 갔던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 대통령으로 12년 만에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 방문에 나섰고, 기시다 총리의 서울 답방이 이어졌다. 최대 걸림돌이던 징용자 배상 문제도 ‘제3

자 변제안’을 제시해 물꼬를 텄다. 문재인 정부가 파기 선언까지 한 한일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가 정상화되고,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재개될 만큼 양국 관계가 회복된 것은 윤 정부가 선제적으로 손을 벌린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정부로선 국내 정치적 부담과 반발을 감수한 ‘통 킨’ 결단이었지만 일본 측 호응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자 배상에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부러 여전히 막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의 선결 사항에 한 달 넘게 답을 주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때 오염수 문제를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다. 지지율 만회를 위해 ‘일본인 납복자 송환’을 추진하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건너뛰고 북한과 비밀 접촉에 나섰다든 말도 나온다. 일본의 태도는 실망스럽지만 예상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상대방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찾아오는 관계 개선 기회를 망칠 수 있다. 과거에 빠져들던 양국 관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대단한 용기와 인내심을 요구한다. 한국은 서둘러 말고, 일본은 재빨리 말아야 한다.

임기 다 된 임원만 사표 수리, 또 국민 속인 LH ‘쇄신 쇼’

아파트 ‘철근 누락’ 공사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쇄신을 위한 첫 조치로 전 임원이 사표를 냈다고 발표하고 그중 4명의 사표만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 4명 중 2명은 이미 임기가 끝났고, 나머지 2명은 다음 달 임기 만료인 임원이라고 한다. 가장 책임이 큰 사장과 감사는 사표 제출 대상도 아니었다. 어쩌고 그만둘 임원을 앞세워 ‘사표 쇼’를 한 꼴이다.

LH의 쇼는 처음도 아니다. 임직원 11명이 개별 예정치 주변 땅을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던 2021년에도 “쇄신”을 내세우며 임원 4명을 경질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중 2명은 임기가 며칠 안 남은 인물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경질된 임원들에게 연봉 1억원의 사내 대학 교수 자리까지 마련해주었다. 국가를 대신해 택지 개발, 주택 분양을 하는 LH는 임직원의 공공 의식과 도덕성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어느 공기업보다 직업 윤리가 형편없다.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 L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102곳을 조사한

결과 15곳에서 철근을 빼먹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5곳이 더 있었다. 직원들이 철근 누락이 “경미하다”며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철근 보강 공사를 하면서 입주주에게는 페인트 도색 공사만 것처럼 속였다.

철근 누락 아파트 중 절반 이상에서 LH 출신이 영입된 업체가 감리 업무를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LH와 수의 계약을 통해 따낸 일감이 최근 3년간 77건, 2300억원대에 달했다. 2년 전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일부 LH 직원들은 “우리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고 반발해 국민 분노에 불 지르기도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윤리 의식 결여가 만연한 공기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정권 코드를 잘 맞췄다고 3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제 LH 자체 쇄신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 사장을 교체하고 외부 전문가를 경영진에 투입해 전면적인 쇄신을 이뤄내는 방법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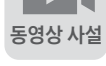
정치 편향 드러낸 ‘정진석 사건’ 판사, 누가 판결 민겠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박병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판사 임용 뒤에 ‘진민주당’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진 뒤 “이들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선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박 판사는 정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의 정치 편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판사는 고교·대학 시절에도 노 전 대통령 탄핵과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판사로 재직하면서 정치 편향 글을 계속 썼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법관 윤리강령 위반 소지가 크다. 박 판사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후 이런 글을

지었다고 한다. 스스로도 문제 있다는 걸 의식했을 것이다. 10여 년 전에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 판사는 “뺨속까지 진미인 대통령”이란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대통령을 비하한 판사도 있었다. 문체가 되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2012년 소셜미디어에서도 법관은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을 전후해 일부 판사는 정치 성향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진보 성향 모임인 국제인권법학회 소속 판사는 ‘재판이 곧 정치’라고 했고, 다른 판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다음 날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들”이라고 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문제 삼지 않았고, 특정 모임 출신들이 사법부 요직을 독차지했다. 박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계속 쓴 것도 ‘김명수 대법원’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법관의 판결을 누가 납득하겠나.



잼버리 죽일 뻔한 '문재인+민주당+지역' 카르텔... 혈세 도적떼를 소탕하라

가차 없이 들춰내라! | 검찰, 감사, 고발, 수사외의, 특검 등, 그 똥이든 다하라! | 그들의 범죄, 다 밝혀내라!

살살이 조사하라!

세계청소년야영대회가 폐영(閉營)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칼을 뽑아라. 그리고 가차 없이 들춰내라.

▲ 잼버리를 새만금으로 유치하고 ▲ 예산 뜯어내고 ▲ 예산 쓰고 ▲ 망신하자 발뺌하고 ▲ 책임 전가하는 당사자가 누구지 살살이 밝혀내라. 검찰, 감사, 고발, 수사외의, 특검 등 그 무엇이든 다 해서.

'잼버리'는 그저 미끼였나?

일부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이미 오래전에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운 사실을 이렇게 전했다.

▲ 전라북도는 2017년 전북 연구원의 <새만금과 전북 대도약 자신감 획득>이란 보고서에 따라, 저비용 고효율의 잼버리를 통해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2023.8.9. 보도) 그럼, 새만금 잼버리는 처음부터 예산을 따내기 위한 소도구였나?

▲ 전라북도는 새만금에 새 공항을 짓겠다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아냈다. 그러나, 잼버리가 시작한 8월 1일까지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조선비즈 2023.8.4. 보도) 무슨 말인가? 예산을 따낸 뒤론, 공항은 흐지부지되고 돈은 다른 데 썼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민주당-지역 정관계는 한통속 적폐 공동체

그렇다면 ▲ 국민 혈세에 팔대 웃고 ▲ 그 피 같은 돈으로 대회 준비함에 하며 크루즈나 즐긴 [지역 첩발팀]의 민낯을 어떻게 들춰내야 할 것인가?

이 작업은 두 갈래로 진행해야 한다.

첫째는, 적폐 규명 자체다. 이 부분은 당국의 수사 원칙과 관행에 맡기면 된다. 둘째는, 그 적폐를 만들어내는 한통속의 정체를 들춰내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민주당-지역 정관계의 한통속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적폐 공동체]의 실체를 낚낚이 드러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자체, 좌익 매체, 그리고 지역 매체들은 지금 모든 나쁜 결과를 ▲ 현 정부 탓 ▲ 조직위원회 탓 ▲ 여가부 탓으로만 뭉뚱 돌린다.

"이사출도(御史出道) 외칠 때

▲ 현 정부 탓? 이러려면 순서상 문재인 정권을 먼저 탓해야 한다. 문재인은 그러나 윤석열 정부만 탓했다.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 어찌고. 그렇다면 물어보자. 2022년의 3.9 정권교체 이전 5년 동안엔 잼버리 준비를 누가 했나? [문재인 정권 + 전북도청 + 조직위] 아니었나? 그레 놓고 이제와 ‘사돈 남 말’ 적 반하장인가?

▲ 조직위원회 탓? 탓이 왜 없었나? 그러나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된 새만금 야영장의 열악한 생활조건(화장실·샤워시설·의류시설 등)의 책임은 조직위보다 지자체가 더 많이 져야 할지 모른다. 위원회란 다분히 걸치레다. 실제 일은 관료가 다 한다. 1천백억 예산을 누가 어디다 집행했는지를 뒤지면 누가 본체인지, 알 것이다.

▲ 여가부 책임?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한 김현숙의 국회 답변을 보면 그를 가만둘 수 없다. 그러나 해외여행 99년 가운데 여가부 공무원의 사례는 두 번밖에 안 된다.

이제야말로 '차징 민주' '가짜 진보' 적폐를 청산할 때다. 당국은 당장 이사출도(御史出道)를 선포하라! 잼버리 꿀벌다가 잼버리 죽일 뻔한 이런 카르텔을 쳐부셔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이재명·김은경은 '혁신' 운운 말라... 그냥 "우리가 다 먹으래" 하라



이재명·우원식이 한 짓거리... 8살짜리 애가 활동가라며 대통령 비난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발행으로 8월 12일 게재 되었습니다.

